

1950년대의 한일경제관계

-한일무역을 중심으로-

丁 振 聲

1950년대의 한일경제관계

-한일무역을 중심으로-

丁 振 聲

I. 머리말	III. 한국의 대일무역정책
II. 1950년대의 한일간 무역의 동향	1. 한일통상협정의 체결
1. 한국 수출입의 추이	2. 대일수입억제 정책
2. 대일무역액의 추이	3. 대일무역정책의 전환—수출진흥정책의 추진과 대일수입제한조치의 해제
3. 대일무역의 비중	IV. 맺음말
4. 한일간 무역의 상품별 구성 추이	

I. 머리말

본고는 1950년대의 한일경제관계를 양국간의 무역이란 측면에서 검토하여 이 시기가 한일 양국의 경제관계에서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당시 양국간의 경제적 교섭은 거의 무역에만 한정되어 있었기에 무역관계의 검토는 곧 경제관계의 검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50년대의 한일경제관계란 테마는 지금까지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한 분야이다. 한국의 무역이나 외환정책 등을 다룬 연구에서 대일무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언급되고 있을 뿐이며,¹⁾ 최근에 성과가 나오고 있는 1950년대 경제에 관한 연구²⁾에서도 한일간무역 문제는 연구자들의 주된

1) 김광섭·웨스트팔(1976), 이대근(1995). 한편, 1950년대의 한국무역만을 다룬 연구로서는 임종철(1970)의 연구가 있는데, 그의 연구는 비록 한일무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1950년대 한국 무역에 관한 충실한 실증적 연구인 동시에 당시의 무역구조의 특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그는 1950년대의 한국무역을 경제적 메커니즘이 아닌 정치적 메커니즘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무역으로 보고, 이 때문에 한국무역은 '자립적' 경제건설을 위한 동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의존경제를 결과하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상오(2003)는 1950년대의 환율정책과 수출정책에 대해 요령있는 설명을 하고 있다.

2) 1950년대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대환(1981), 김양화(1996), 이대근(2002), 이상철(2003) 등이 있다.

관심사는 되지 못했다. 이는 1945년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됨으로써 기존의 한일 간 경제관계가 단절되는 한편, 한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에 편입되고 미국으로부터의 원조가 한국경제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1950년대의 한일 무역구조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수행되지 않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본고는 이러한 연구사의 공백을 메우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고는 단순히 연구사의 공백을 메우는 작업일 뿐만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는 당시의 한일 경제관계가 소원했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물어보는 작업이기도 하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근대에 들어와서의 한일 간 무역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었으며 양국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도 계속 커졌지만, 1950년대만은 이러한 추세에서 벗어나 있다. 왜 이런 장기적인 추세에서의 이탈이 해방 후 10여년이란 기간에 걸쳐 일어났는가? 이 시기에 한일 간의 무역구조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었는가? 그 변화는 장기적인 변화 추세와 일치하는 것인가, 아니면 과거와 단절된 전혀 새로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50년대의 한일 간의 무역에 대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즉, 제2절에서는 1930년대와 60년대 이후의 한일 무역관계와의 비교분석을 염두에 두면서 주로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50년대의 한일 무역의 동향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제3절에서는 한국의 대일 무역정책을 분석하여 정치적 요인이 무역정책을 통해 양국 간의 무역관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분석하였다.

II. 1950년대의 한일 간 무역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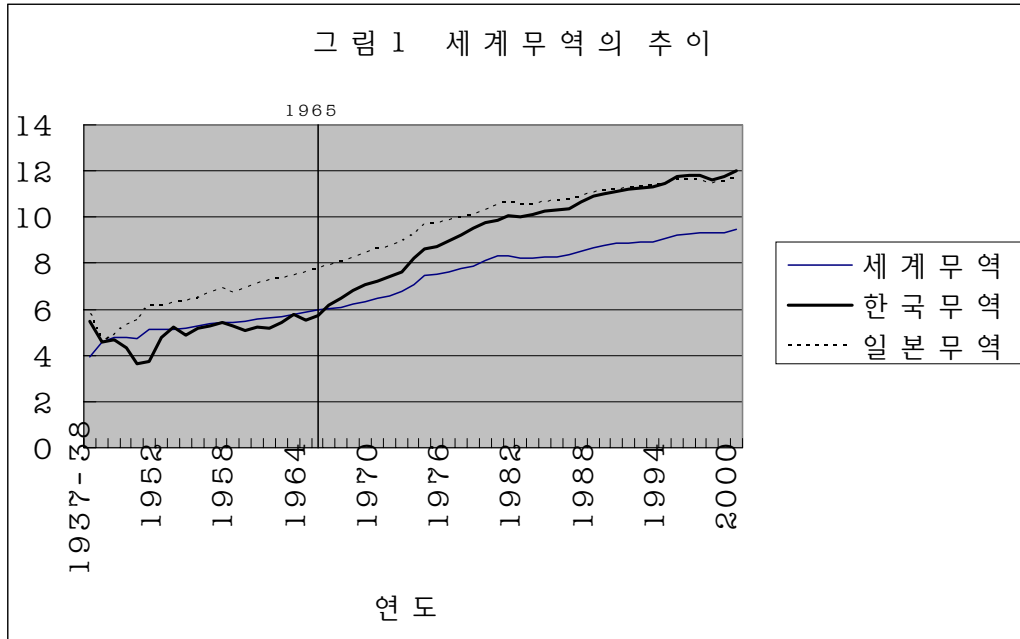
1. 한국 수출입의 추이

한일 간 무역의 추이를 보기 전에 우선 한일 양국의 무역액의 추이를 개관하기로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 세계무역은 브레튼우즈체제 하에 순조로운 발전을 하게 된다. 한일 양국의 무역량도 세계무역의 발전과 함께 증대되었으나, 양국 무역은 상이한 과정을 겪으며 발전하였다.(그림1)

한국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일본의 패배로 심각한 무역의 축소가 불가피하였다. 명목기준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1947년의 한국의 무역액은 1937-38년 무역액의 약40%, 일본의 무역액은 약30%로 감소하였다. 반면, 세계무역액은 같은 기간에 약 2배로 증가했다.

그러나 일본의 무역액은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1960년에는 47년의 약12배(명목기준)에 달하였다. 같은 기간 약 2.7배 증가한 세계무역액 증가 템포보다 다섯 배나 빠르게 성장한 셈이다. 반면, 한국의 무역액은 같은 기간 약 1.8배 증가하는데 그쳤을 뿐이다. 1950년대의 한국의 무역은 거의 제자리걸음을 면하는 수준이었으며 한국은 세계무역의 흐름에서 혼자 고립되어 있는 모습이었다.

<그림 1> 세계무역의 추이



주: 세로축은 각 연도 무역액(수출액+수입액) 지수(1947=100)의 자연로그값이다.

자료: Statistical Yearbook, U.N.

한국 무역이 세계 무역보다 빨리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은 1965년 이후였다. 1965년의 한국 무역액은 1960년의 약 1.7배 증가했으나, 매년 증감의 기복이 있어 뚜렷한 증가추세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그 증가율은 여전히 세계 무역의 증가율을 하회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5년경부터 한국무역은 세계 무역은 물론 일본 무역의 증가율도 능가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표 1> 국민총지출 및 수출·수입의 연평균증가율

	총지출		수출		수입	
	불변가격	경상가격	불변가격	경상가격	불변가격	경상가격
1912-20	4.7	15.4	14.0	31.5	4.7	18.8
1920-30	1.7	-1.0	6.4	3.2	7.7	3.3
1930-37	5.4	8.2	9.6	13.8	11.7	14.2
1954-60	3.8	4.6	2.1	2.3	1.5	0.6
1960-70	8.2	14.3	36.7	39.0	19.5	20.5
1970-80	7.7	23.7	23.0	35.8	14.3	27.2
1980-90	8.4	15.0	6.0	14.0	10.6	12.0
1912-37	3.7	6.0	9.6	14.6	7.8	11.1
1954-90	7.7	15.5	17.8	24.2	12.4	16.3

주: 1) 증가율은 해당 년을 중심으로 하는 3년 평균치간의 연평균증가율이다.

2) 1954년 이후의 수출은 상품수출만이다. 수입은 1970년까지는 상품과 용역의 수입이며 그 이후는 상품만의 수입이다. 안병직·김낙년(1995)의 1954년 이후의 수출의 성장률은 상품과 용역의 수출을 다 포함한 수치이다.

자료: 안병직·김낙년(1995), 한국은행 <국민계정> 2000.

한국의 수출입의 실질성장률을 식민지기와 1950년대 이후와 비교하여 보면(표 1), 식민지기의 성장률(실질) 9.6%는 해방 후(1954~90년)의 성장률 17.2% 보다 훨씬 낮지만 국제적으로는 대단히 높았으며, 수출의 증가율이 국민총생산의 2배 이상의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표 1). 즉, 식민지기와 해방 후를 통틀어서 수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국민총지출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높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추세에 비추어 볼 때 1950년대는 이례적인 시기였다. 이 시기의 수출 증가율은 2.1%, 수입은 불과 1.5%였다. 뿐만 아니라, 50년대는 수출 및 수입의 성장률이 국민총지출의 성장률보다도 낮다. 이러한 특징은 명목가격으로 보아도 그 움직임에는 큰 차이가 없다.

50년대의 무역의 축소 내지 정체는 무역의존도의 하락 및 정체를 가져왔다(표 2). 1930년대에 20%에 달했던 수출의존도는 1950년대에는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입의존도 역시 30년대에 20~30%에 달하던 것이 1950년대에는 10%대에서 추이하였다. 무역의존도가 30년대 후반기의 수준(65%)에 도달하는 것은 70년대 중반 이후였다. 즉, 해방 전에 도달했던 무역의존도 수준이 해방 후에 그대로 계승된 것이 아니라, 해방직후 일본과의 경제관계의 단절에 의해 무역이 거의 붕괴된 후 다시 회복했던 것이며, 이것은 양 시기의 무역의 내용이 변화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2> 무역의존도의 추이

(단위 : %)

	수출의존도	수입의존도	무역의존도
1911	3.7	11.3	15.0
1920	12.6	14.6	27.2
1930	19.3	22.2	41.5
1938	29.6	35.5	65.1
1955	1.5	10.6	11.1
1960	3.7	13.2	16.9
1965	8.2	17.6	25.8
1970	15.1	25.2	40.3
1975	29.5	34.5	64.0

자료 : 안병직 · 김낙년(1995).

해방 이후의 한국의 수출입액 동향을 보다 자세히 보면, 수출은 1960년경부터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 수출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1,500만 달러에서 4,000만 달러 사이를 오가고 있었으며 뚜렷한 경향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1960년부터는 매년 대폭적인 수출 증대가 이루어졌다. 반면, 수입에서는 1964년까지 뚜렷한 증가경향을 발견할 수 없다. 이 시기의 수입은 2억 달러에서 5억 달러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었으며 매년의 변화가 크다. 수입이 수출과 마찬가지로 매년 큰 폭으로 증대하기 시작한 것은 1965년 이후의 일이다. 이상에서, 1965년 이후 한국 무역액이 큰 폭으로 증대하기 시작한 것은 주로 수입 동향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한국의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수출					수출-수입
		수입(a)	일반수입	원조수입(b)		
					b/a(%)	
1946	3.5	60.7	11.2	49.5	81.5	-57.2
1947	26.8	231.6	31.6	200.0	86.4	-204.8
1948	22.3	208.0	32.4	175.6	84.4	-185.7
1949	13.8	132.8	16.4	116.4	87.7	-119.0
1950	29.4	47.7	2.9	44.8	93.9	-18.3
1951	15.6	155.3	26.1	129.2	83.2	-139.7
1952	27.7	214.2	53.6	160.5	74.9	-186.5
1953	39.6	345.4	153.9	191.8	55.5	-305.8
1954	24.2	243.3	93.9	149.4	61.4	-219.1
1955	18.0	341.4	108.6	232.8	68.2	-323.4
1956	24.6	386.0	66.2	319.9	82.9	-361.4
1957	22.2	442.1	46.9	374.0	84.6	-419.9
1958	16.5	378.2	48.7	311.0	82.2	-361.7
1959	19.8	303.8	81.0	210.7	69.4	-284.0
1960	32.8	343.5	97.2	231.9	67.5	-310.7
1961	40.9	316.1	103.1	196.8	62.3	-275.2
1962	54.8	421.8	179.0	218.5	51.8	-367.0
1963	86.8	560.3	232.7	232.6	41.5	-473.5
1964	119.1	404.4	184.5	142.6	35.3	-285.3
1965	175.1	463.4	248.4	135.5	29.2	-288.3
1970	835.2	1984.0	1230.0	161.2	8.1	-1148.8

자료: 1946-51년은 韓國産業銀行, 《産業經濟10年史》.

1952년 이후는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수입동향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의 하나로서, 무역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무역은 언제나 수입이 수출을 크게 초과하여 대폭적인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이 무역적자를 메우고 있는 것이 원조 및 차관에 의한 도입된 외국자금이었다.³⁾ 표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50년대의 수입의 약 80%는 공공원조에 의한 수입이었다. 따라서, 수입은 이러한 외국자금의 도입실적에 크게 제약을 받고 있었는데, 외국자금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미국의 원조가 1958년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 한국의 수입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다.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원조수입의 비중은 1959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여 1965년에는 29%, 70년에는 8%로 하락했다. 한편, 1966년 이후는 공공원조에 대신하여 차관이 증대된 것이 수입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⁴⁾

3) 1930년대에는 이른바 식민지 공업화의 진전에 따라 한국의 무역수지의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당시 이를 결제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으로부터의 자금유입이었다(김낙년 2003).

4) 차관에 의한 수입은 1966년에 15%, 70년에는 33%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차관도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외국인의 직접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2. 대일무역액의 추이

대일무역액의 동향도 전체 무역액의 움직임과 대동소이한 움직임을 보였다(표 4 참조). 달러 베이스의 한국 무역의 국별 통계(자료b)는 1955년부터 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1955~57년의 국별수입통계에는 국가명 미상액이 전체 수입액의 50% 전후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신용력이 떨어진다. 한편, 圓베이스로는 1948년부터 1958년까지의 국별통계(자료a)를 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수입에 원조수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단일환율이 성립되어 있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통계와 1955년 이후의 달러 베이스 통계를 접목시키기는 곤란하다. 한편 일본측 자료로부터는 한일무역에 관한 1946년부터의 통계를 얻을 수 있다.

<표 4> 對일본 수출입금액

연도	對日수출			對日수입		
	(a) 백만환	(b) 백만달러	(c) 백만달러	(a) 백만환	(b) 백만달러	(c) 백만달러
1946			0.5			14.8
1947			2.5			18.9
1948	11		5.1	5		17.9
1949	18		3.5	19		12.8
1950	246		15.7	36		18.1
1951	386		7.1	886		13.7
1952	1,054		20.2	4169		49.8
1953	1,497		8.6	10,666		106.8
1954	2,199		8.1	10,612		68.6
1955	3,531	7.3	9.5	7,067	(19.1)	39.5
1956	4,285	8.1	11.1	6,820	(20.7)	63.6
1957	5,582	10.8	12.2	8,529	(33.5)	57.0
1958	6,916	9.7	11.0	10,335	50.0	56.7
1959		12.7	12.0		32.4	62.4
1960		20.2	18.6		70.4	100.1
1961		19.4	22.4		69.2	125.9
1962		23.5	28.5		109.2	138.1
1963		24.8	27.0		159.3	159.7
1964		38.2	41.7		110.1	108.8
1965		44.0	41.3		166.6	180.3
1970		234.3	229.0		809.3	818.2

주: 대일수입 (a)는援助輸入을 包含하지 않음.

대일수입(b)의 ()안의 수치는 신용력이 떨어지나 참고로 제시하였음(본문 설명 참조).

(c)의 대일수출은 일본의 대한수입, 대일수입은 일본의 대한수출의 수치임.

자료: (a)의 1948~52년은 貿易協會, 《貿易年鑑》, 1953~58년은 韓國銀行, 《經濟年鑑》.

(b)는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c)는 通商産業調査會, 《戰後日本の貿易20年史》, 通商産業省, 《通商白書》.

우선, 1950년대의 완벽한 시계열자료를 얻을 수 있는 일본측 통계(자료c)를 통해서 대일무역액의 추이를 보면, 대일수출(일본의 대한수입)은 1952년을 예외로 하면, 1959년까지 1000만 달러 전후에서 추이했으며 1960

년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일수입(일본의 대한수출)은 1953년의 대폭적인 증대 및 55년의 큰 하락을 예외로 하면 1959년까지 대체로 5~6천만 달러 수준에서 추이했으며, 1960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한국측의 통계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대일수출은 50년대 후반에 7백만 달러에서 1200만 달러 사이에서 움직이다 60년부터 뚜렷한 증가를 보이기 시작했다. 대일수입은 58년부터 밖에 알 수 없는데, 58년에 5,000만 달러에 달했던 수입액은 59년에 3,200만 달러로 하락한 후 60년에 다시 7,000만 달러로 크게 상승한 후 증가추세를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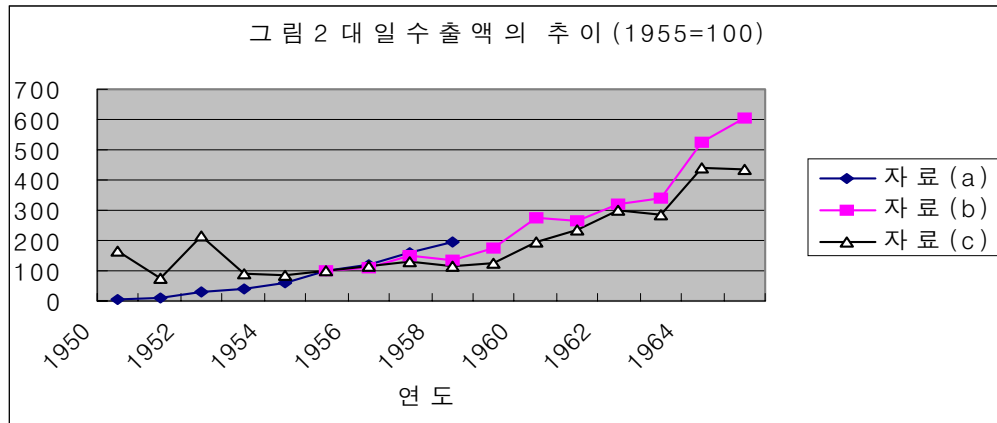
민간무역의 동향을 원베이스로 보면(자료a), 수출은 1952년에 크게 증가한 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달러베이스의 수출액이 기복을 그리며 정체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원조수입을 제외한 일반수입 만의 동향을 보면, 대일수입은 1952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54년에는 약106억 환에 달했으나 1955년에는 전년보다 약36억 환이나 감소였으며, 57년까지 정체상태에 있었다. 절대액이 계속 증가한 대일수출과는 대조적인 움직임이다.

대일무역의 동향을 알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 표 4의 각기 다른 자료에 의한 대일무역액을 지수화하여(1955년=100) 그래프화 한 것이 그림 2와 그림 3이다. 이에 의하면, 각 자료의 숫치는 절대금액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매년의 움직임은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동향에서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대일수출과 대일수입 모두 1959년까지 낮은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다가 1960년부터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⁵⁾ 한국의 전체수입은 60년대 전반에 뚜렷한 증가의 경향을 보이지 않았는데 반해 대일수입이 60년부터 증가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수입의 경우는 수출보다 기복이 심한데 이것은 한국정부의 대일무역정책의 영향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1953년에 대일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한국전쟁에 소요되는 물자의 수입이 많았기 때문이었으며, 대일단교가 단행되었던 1955년에는 대일수입이 크게 감소하였다. 1959년의 대일수입의 감소도 이 해에 있었던 두 번째의 대일교역중지의 영향이라고 생각되지만, 일본측 통계에서는 대한수출이 오히려 약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 통계의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는 현재 정확히 알 수 없다. 1960년대 전반에 전체수입의 증가보다도 대일수입의 증가가 먼저 증가하기 시작한 것도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 대일수입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는 규제들이 이승만 정권의 붕괴와 함께 풀린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대일무역은 수출입 모두 60년대에 크게 증가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일 무역수지의 역조가 크게 심화되었다(표 5 참조). 일본측 통계(자료c)를 보면, 1950년대의 대일무역 적자는 1953년과 같은 예외적인 연도를 제외하면 대체로 3,000만 달러에서 6,000만 달러 사이에서 추이하다 60년 이후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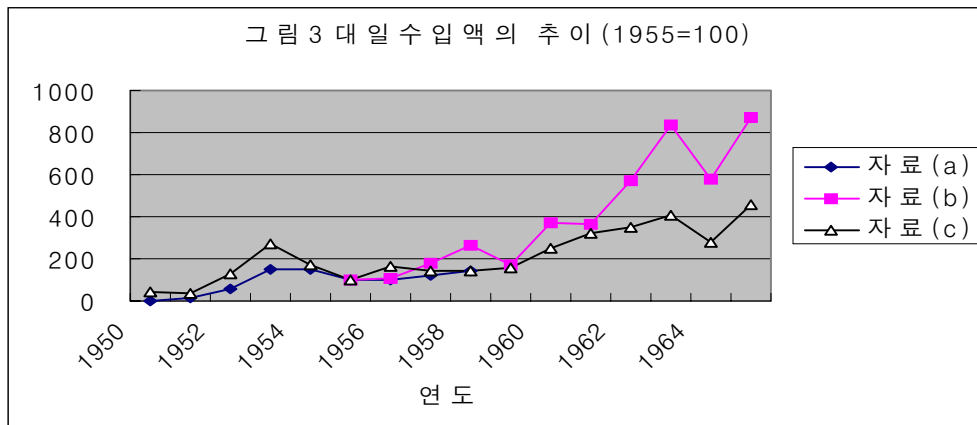
5) 단, 전술한 바와 같이 원베이스의 수출액은 50년대에 완만한 증가를 했다.

<그림 2> 대일수출액의 추이



자료: (a)의 1948~52년은 貿易協會, 《貿易年鑑》, 1953~58년은 韓國銀行, 《經濟年鑑》.
 (b)는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c)는 通商産業調査會, 《戰後日本の貿易20年史》.

<그림 3> 대일수입액의 추이



자료: <그림 2>와 동일.

한국측의 통계(자료b)를 보면, 1958년에 4천만 달러였던 대일무역 적자는 1965년에는 약1억 2천만 달러, 1970년에는 약5억 8천만 달러에 달했다. 더구나, 한국의 전체 무역수지의 역조에서 차지하는 대일무역역조의 비중도 대일무역역조의 증가와 함께 증가했다. 58년에 전체 역조에서 차지하는 대일역조의 비중은 11.1%였으나, 1965년에는 42.5%, 70년에는 50%를 상회하였다.

1950년대의 대일무역역조 절대액은 60년대에 비해 적었지만, 대일수출과 대일수입의 심각한 불균형은 당시에 중요한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일본측 통계(자료c)에 의하면 한국전쟁이 종료되는 1953년 이후 대일수출은 대일수입의 20% 전후에 불과했다. 민간무역만을 대상으로 한 한국통계(자료a)에 따르면, 1952~54년은 대일수출은 대일수입의 20% 전후를 차지했지만, 대일수입이 감소한 1950년대 후반에는 50~60%에 달했다. 단 이 숫자는 수입에 원조수입을 포함하

지 않은 것이어서 수출의 비중이 과대평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58년의 경우, 원조수입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수출은 수입의 67%(자료a)이나 원조수입을 포함하면 19%(자료b)에 불과하다.

<표 5> 대일무역역조의 추이

연도	輸出-輸入			수출/수입(%)			대일역조/전체역조(%)	
	(a) 백만원	(b) 백만달러	(c) 백만달러	(a)	(b)	(c)	(a)	(b)
1946			-14.4			3.0		
1947			-16.4			13.2		
1948	6		-12.8	219.0		28.5	-	
1949	-1		-9.3	95.3		27.3	2.6	
1950	210		-2.4	683.1		86.7	76.7	
1951	-500		-6.6	43.6		51.8	65.9	
1952	-3,115		-29.6	25.3		40.6	61.2	
1953	-9,169		-98.2	14.0		8.1	49.9	
1954	-8,413		-60.5	20.7		11.8	39.9	
1955	-3,536	-11.8	-30.0	50.0	38.2	24.1	9.0	3.6
1956	-2,535	-12.6	-52.5	62.8	39.1	17.5	11.1	3.5
1957	-2,947	-22.7	-44.8	65.4	32.2	21.4	11.1	5.4
1958	-3,419	-40.3	-45.7	66.9	19.4	19.4	10.6	11.1
1959		-19.7	-50.4		38.2	19.2		6.9
1960		-50.2	-81.5		28.7	18.6		16.2
1961		-49.8	-103.5		28.0	17.8		18.1
1962		-85.7	-109.6		21.5	20.6		23.4
1963		-134.5	-132.7		15.6	16.9		28.4
1964		-71.9	-67.1		34.7	38.3		25.2
1965		-122.6	-139.0		26.4	22.9		42.5
1970		-575.0	-589.2		29.0	28.0		50.1

자료: 표3과 동일.

3. 대일무역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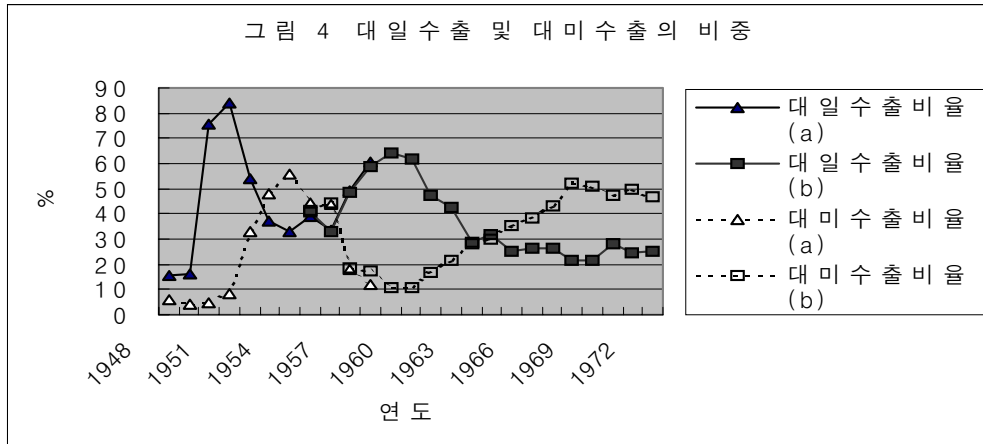
해방 후 한국의 무역내용에서 나타난 중요한 변화의 하나는 대일무역의 비중이 감소했다는 점이다. 해방 전에는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일본이 70~80%에 이르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방 후에는 일본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인 점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그 비중은 크게 줄었으며, 대신 미국이 또 하나의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 부상하였다.

1960년대까지를 시야에 넣고 무역에서 차지하는 일본과 미국의 비중의 추이를 자세히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자. 그림4와 그림 5는 1948년부터 1972년까지의 한국의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양국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1948~1958년의 자료는 원조수입을 제외한 민간무역에서의 움직임이고, 1955~1972년 자료는 원조수입을 포함한 전체무역에서의 움직임이다.

이 그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은, 1960년대 중반을 분기점으로 하여 일본과 미국의 위치가 뒤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즉 1960년대 전반까지는 일본이 최대의 수출시장인 반면 미국이 최대의 수입시장이었으나, 1960년대 후반에는 그 관계가 뒤바뀌고 그 후 최근 중국이 부상하기 전까지는 그 구도를 유지해 왔다. 이것은 1960년대의 한국의 경제개발이 궤도에 오르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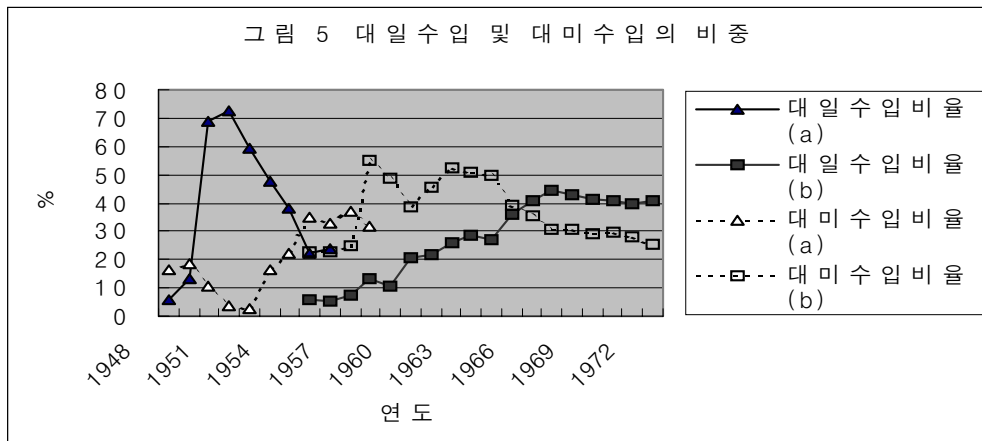
양국간의 무역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림 4> 대일수출 및 대미수출의 비중



자료: (a)의 1948~52년은 貿易協會, 《貿易年鑑》, 1953~58년은 韓國銀行, 《經濟年鑑》.
(b)는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그림 5> 대일수입 및 대미수입의 비중



자료: <그림 4>와 동일.

일미 양국 무역의 비중이 60년대 후반에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데 반하여, 1950년대에는 기복이 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일수출의 비중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부터 70%를 넘는 높은 수준에 다다르지만, 1953년부터는 크게 떨어져 30%대에서 추이하였다. 그러나, 1957년부터 다시 대일수출의 비중이 커져 1958~60년에는 다시 전체 수출의 60% 전후를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대일수출액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61년부터 대일수출의 비중은 감소하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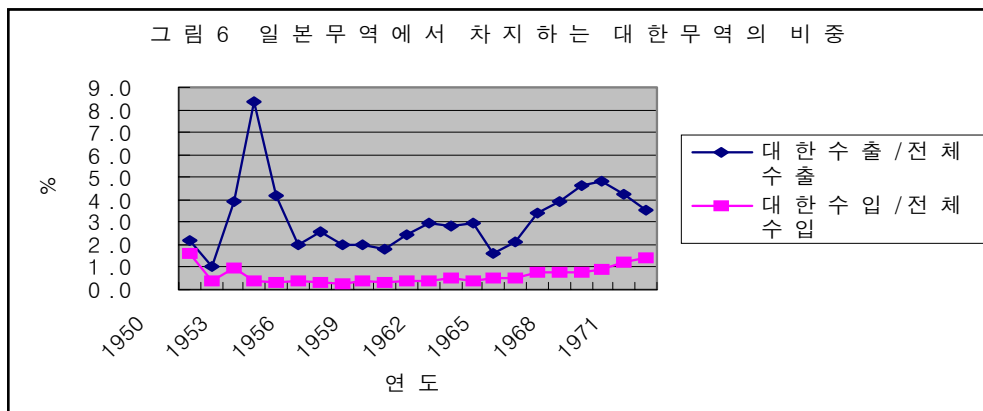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대일수입 비중의 동향을 우선 원조수입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48~58

년)만을 보면, 한국전쟁기에 50~70%를 차지하던 대일수입은 급격히 감소하여 1955년에는 10%대로 낮아졌다가 56년부터 다시 증가하였으나 1958년의 경우에도 23.7%에 그쳤다. 1958년의 경우, 원조수입을 포함한 대일수입의 비중은 13.2%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조수입을 포함할 경우 1957년 이전의 대일수입의 비중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대일수입(원조수입을 포함)의 비중은 1960년부터 빠른 속도로 증대하기 시작하여 60년대 후반에는 40%대에서 추이하였다. 이처럼 50년대의 기복이 심한 움직임은 경제적 요인보다도 정치적, 정책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1955년과 59년에 대일수입의 비중이 떨어지는 것은 일본과의 교역 단절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무역에서 대일무역이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데 반하여, 일본무역에서의 대한무역의 위치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그림 6).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아주 미미한 액수에 불과했다. 대체로 대한수입은 일본 수입의 0.5%미만이란 아주 저조한 수준이었으며, 60년대 후반부터 그 완만히 증가하는 하고 있으나 70년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1%를 넘어섰을 뿐이다. 반면, 대한수출은 전체 일본수입의 2~4%대를 추이하고 있었다. 2차 대전 직후를 제외하면, 대한수출 비중은 1952~54년에 높아져 53년은 8.4%를 차지하였으나, 50년대 중반 이후로 그 비중은 다시 2%대로 떨어진 후 정체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60년대 후반부터 상승하여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는 4%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52~54년을 예외로 하는 50년대에는 일본의 10대수출국에 끼지 못했지만, 70년과 71년의 경우 일본의 제2, 제3의 수출국이 되었다.

52~54년의 예외적인 대한수출 비중의 상승은 한국전쟁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전쟁은 일본에 이른바 <特需>를 가져와 그 후 일본의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발판을 이루었다. 이 특수 외에도 한국전쟁은 일본의 대한수출을 크게 증대시킴으로서 일본의 경제성장에 기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일본무역에서 차지하는 대한무역의 비중



자료: 通商産業調査會, 《戦後日本の貿易20年史》, 通商産業省, 《通商白書》.

4. 한일 간 무역의 상품별 구성 추이

1970년대에 이르러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1930년대 수준에 도달했지만, 그 내용은 이미 살펴본 지역별 구성뿐만 아니라 상품별 구성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식민지기와 해방 후의 통계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표6과 표7을 통해 그 대체적인 변화는 확인할 수 있다.

표 6에 따르면, 대일 수출의 경우, 가장 큰 특징은 농업의 비중이 크게 하락한 점이다. 즉 30년대의 농산품 비중은 60% 전후였지만⁶⁾ 70년에는 수산물의 수출을 포함해도 20%이하로 하락했다. 30년대의 농산품 수출의 대부분이 쌀이었던 반면 해방 후의 농수산물 수출의 대부분은 수산물이었다. 해방 후 농산품에 대신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광업품이었다. 한국은행 자료(자료 a)에 의하면, 58년의 경우 76%까지 차지하고 있던 광업품은 70년에는 40%이하로 하락했으며, 일본측 자료(자료 b)에 의하여도 같은 경향을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에 수출된 공업제품의 비중을 보면, 30년대 후반에 20%대에서 50%로 상승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그 상품별 구성을 보면 해방 전에는 방직부문과 화학부문의 비중이 높았다. 방직부문의 주요 수출품은 생사였지만, 하급품의 면사, 면직물이 수출되고 있었음은 주목된다. 화학부문의 주요수출품은 주로 정어리를 원료로 한 동물성비료 및 동물성유지였으며 식민지조선에서의 비료공업의 발달을 반영한 인조비료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1940년에 금속부문의 비중이 갑자기 높아진 것은 금속공업의 발전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공업의 원료인 금속광물이 낮은 단계의 가공을 거쳐 일본으로의 이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즉, 화학부문과 금속부문에서의 수출은 공업부문의 수출로 집계되어 있지만 여전히 자원채취적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 반면, 방직부문에서 일본에의 면제품 수출이 보이고 있는 것은 식민지 한국에서의 방직부문의 발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란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더구나 중국의 <만주> 지방에 대한 면제품의 수출까지를 고려한다면, 방직부문 전체로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압도적으로 컸다는 한계는 있으나, 30년대에는 식민지 한국의 방직, 방직 부문은 수출산업으로서의 지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⁷⁾

공업제품의 대일수출은 해방 후 급격히 감소한 후 196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한국은행 자료(자료 a)에 의하면 공업제품의 비중은 58년에 8%, 60년에 15%, 70년에 43%로 상승하였다. 공업제품은 거의 대부분이 원료별제품(표 6에는 방직·금속에 기재)⁸⁾과 잡제품인데, 잡제품은 주로 경공업제품이며 원료별제품에는 섬유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면제품의 대일수출이 언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59년에 약 120만 달러, 60년에 200만 달러의 면포가 일본에 수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貿易年鑑》 1960~1961년).

한편, 일본측 자료(자료 b)에 의하면, 1960년까지 공업제품의 수출은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

6) 1940년에 농산품의 수출이 급감한 것(표 6)은 그 전년의 벼농사의 대홍작의 영향이 크지만, 30년대 후반에 들어서의 미곡 수출량의 감소추세를 반영하는 면도 있다.

7) 식민지기의 방직업에 대한 경영사적 연구로는 정안기(2001), 주익중(2002)을 참조.

8) 《경제통계연감》에는 섬유제품의 항목이 따로 없으며 원료별 제품 항목이 있다. 여기에는 섬유제품, 종이류, 금속, 요업제품이 포함된다. 잡제품은 주로 경공업제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준이었으나, 60년대부터 공업제품의 비중이 늘어나 70년에는 24%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업제품의 거의 전부는 방직부문의 제품이었으며, 공업제품으로 분류하지 않은 <기타> 항목에도 상당부문의 경공업제품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70년의 한국의 대일수출품은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하는 경공업제품 위주로 바뀌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60년대에 시작하여 60년대 후반에 가속화되었다는 것, 그리고 50년대는 면제품 등 약간의 공업제품의 수출이 보이기는 하지만, 식료 및 원료의 수출과 공업제품이 수입이란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7을 통해 대일 수입의 상품별 구성을 보면, 공업제품의 비중이 80%에 달하고 있는 점에서는 해방 전과 해방 후는 차이가 없다. 30년대와 70년을 비교하면, 식료품 수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한국은 50년대에 이미 미국으로부터 원조 등을 통해 다량의 식량수입을 하여왔으나, 70년의 일본으로부터의 식료품 수입은 쌀의 수입이었다.

한편 공업제품의 경우, 30년대에 비해 해방 후에는 기계류 수입의 비중이 돌출하여 큰 점이 주목된다. 30년대에 기계류의 수입의 비중은 다른 부문 제품의 비중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왔었는데, 50년대의 하락을 거쳐 60년대에 다시 빠르게 증가하였다. 또한 50년대에 기계류 수입의 비중은 10%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50년대의 가장 중요한 수입품은 화학제품이었는데 이것은 비료의 수입이 대부분이었다. 60년대에 수입대체산업으로 건설한 비료공장이 가동되면서 화학제품 수입의 비중은 감소하기 시작했다. 섬유제품의 수입은 해방 전의 가장 중요한 수입품이었으나, 30년대를 통해 그 비중은 감소했다. 해방 후에도 그 비중은 해방 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섬유제품의 내용은 1960년대에 변화하여 면제품 비중은 낮아지고 화학섬유가 수입의 주종을 이루었다.⁹⁾

<표 6> 대일수출의 상품별 구성의 추이

(단위:%)

연도	농업	수산업	광업	공업					
					방직	금속	화학	기계기구	기타
1930	61.8	6.5	3.9	27.6	11.5	2.4	7.8	0.5	5.4
35	59.9	3.7	9.8	26.1	5.6	3.6	12.4	0.6	3.9
40	13.1	7	23.0	56.4	10.6	16.5	19.1	1.9	5.7
1956(a)	-	-	-	-	-	-	-	-	-
(b)	13.3		82.2	0.2	0.1	-	-	0.1	4.5
1958(a)	14.8		75.6	8.2	(8.0)		0.0	0.0	0.2
(b)	21.1		73.2	0.2	0.2	-	-	-	5.4
1960(a)	37.3		46.6	15.2	(14.7)				
(b)	35.7		57.5	0.0	0.0	-	-	-	6.8
1965(a)	44.6		39.8	15.2	(8.1)		0.1	2.0	5.1
(b)	37.4		51	6.5	6.5	-	-	-	5.1
1970(a)	17.3		36.1	43.3	(15.2)		0.8	2.0	24.3
(b)	18.2		38.1	24.0	24.0	-	-	-	19.7

자료: 1930-40년은 김낙년(2003), (a)자료는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b)자료는 通商産業調査會, 《戰後日本の貿易》

9) 일본측 자료에 의하면, 1956년의 섬유제품 수입 중 면직물의 비율은 11.4%, 화학섬유의 비율은 8.9%였다. 그러나, 1965년에는 각각 5.6%, 31.0%로 두 제품의 비율이 역전되었다(通商産業調査會 1967).

易20年史》, 通商産業省, 《通商白書》.

주: 1) 1930-40년의 기타는 공업품 중 방직, 금속, 화학, 기계기구 외의 모든 공업품을 포함함.

2) (a)자료의 농수산업은 식료품 및 산동물, 방직·금속은 원료별제품, 기타는 잡제품 항목의 수치임.

3) (b)자료의 농수산업은 식료품, 방직은 섬유제품, 기타는 항목별 수치가 나온 품목 외의 모든 항목의 합계로 공업제품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b)자료의 공업란의 수치는 방직, 금속, 화학, 기계기구제품 비중의 합계임.

<표 7> 대일수입의 상품별 구성의 추이

(단위: %)

연도	농업	수산업	광업	공업					
					방직	금속	화학	기계기구	기타
1930	5.8	1.3	4.3	87.5	25.0	11.1	18.1	9.7	23.6
35	8.1	0.8	3.5	85.8	21.3	13.4	17.3	12.0	21.8
40	6.1	1.2	7.0	82.1	14.4	15.0	12.9	18.9	21.5
1956(a)	-	-	-	-	-	-	-	-	-
(b)	1.1	-	60.0	14.5	7.3	26.4	11.8	38.9	
1958(a)	1.4	22.3	76.1	(31.6)		25.0	16.2	3.3	
(b)	1.6	-	65.8	14.7	9.1	27.1	14.9	32.7	
1960(a)	0.5	5.3	75.0	(14.2)		52.8	6.4	1.6	
(b)	0.8	-	85.6	8.8	6.8	33.3	36.8	16.3	
1965(a)	0.4	13.4	86.0	(32.4)		30.9	20.3	2.5	
(b)	0.2	-	91.7	20.2	15.8	28.5	27.2	8.1	
1970(a)	9.2	8.5	81.8	(29.5)		11.6	37.5	3.2	
(b)	13.7	-	77.6	18.4	12.2	10.8	36.2	8.7	

자료: 표7과 동일

이상에서 해방 전의 미곡수출과 공업제품의 수입으로 **특징지**를 수 있었던 한일무역구조는 5, 60년대를 거치면서 경공업의 수출과 기계로 대표되는 중화학공업의 수입이라는 구조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구성상의 변화는 1960년대에 들어와서 시작되었으며 1950년대에는 여전히 농수산물 내지는 원료를 수출하고 공업제품을 수입하는 구조에서 탈피하고 있지 못했다. 단, 50년대 후반에 기계류 수입의 비중이 비교적 높았다는 점, 그리고 50년대 말부터 미미하지만 섬유제품의 수출이 보이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이하에서는 50년대의 움직임을 보다 자세히 보기로 한다.

1950년대 후반의 대일수출 및 대일수입의 상품별 구성에 관한 자료는 《貿易年鑑》과 일본측 통계가 있다. 일본측 자료는 상품분류가 소략하므로 여기서는 《貿易年鑑》의 자료만을 검토한다. 단, 《貿易年鑑》 자료의 경우, 수입은 원조수입과 정부수입을 제외한 일반수입에 관해서만 알 수 있다(표 8, 9).

표 8에 의하면, 이 시기의 주요 대일수출품은 식료품, 광물(금속·비금속)과 같은 1차산업품과 섬유제품으로, 이들 품종만으로 전체 대일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식료품은 수산물, 금속광물은 철광석, 비금속광물은 흑연이 주요 상품이었다. 섬유제품의 경우, 1958년까지는 대부분 잠사로 면제품의 수출은 보이지 않았으나, 59년부터는 면제품의 대일수출이 보이며 금액도 잠사를 크게 상회하였다.¹⁰⁾ 또한 표 9를 통해 대일수입품은 주로 공업제품으로 그 중 중요한 것은 섬유제품, 기계, 비료, 화공약품 등이었음을 알 수 있다¹¹⁾. 특히 기계류가 30% 전후로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이상에서 50년대에는 대일수출입의 상품별 구성에 큰 변동은 없었으나, 50년대 말부터 면제품의 대일수출이 보이는 것, 그리고 기계류의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비록 식료 및 원료를 수출하고 공업제품을 수입하는 구조를 바꿀 정도의 것은 아니었지만, 60년대의 무역구조의 변화를 미리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면에서 뿐 아니라 1930년대의 상품별 구성의 변화 경향과도 유사한 면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상품별 구성에서 보았을 때, 한일무역구조는 1930년대 후반부터 맹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경향, 즉 경공업제품의 수출과 기계류를 중심으로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입이라는 경향이, 해방 후 일단 끊어졌으나 50년대 후반부터 미약하나마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8> 商品別 對日輸出의 推移(民間輸出)

(천달러, %)

	1955		1956		1957		1958		1959	
食料品	1127.2 [14.6]	(48.5)	1594.6 [21.1]	(63.7)	1735.1 [16.6]	(42.3)	1929.0 [19.2]	(58.0)	3091.0 [25.9]	(55.0)
纖維品	904.7 [11.7]	(39.1)	1362.9 [18.0]	(48.8)	1066.5 [10.2]	(32.4)	1058.0 [10.5]	(52.5)	2020.0 [16.9]	(69.7)
燃料	323.0 [4.2]	(100.0)	0 [0]	(-)	63.7 [0.6]	(37.9)	0 [0]	(-)	733.0 [6.1]	(100.0)
皮革 및 木材	73.1 [0.9]	(20.6)	22.5 [0.3]	(17.4)	2924.3 [28.0]	(34.7)	79.0 [0.8]	(60.8)	334.0 [2.8]	(91.5)
金屬鑄類	1694.3 [21.9]	(22.5)	1359.0 [17.9]	(11.9)	3597.3 [34.4]	(97.6)	3609.0 [36.0]	(52.1)	3154.0 [26.4]	(44.2)
非金屬鑄 類	2504.5 [32.4]	(99.3)	2383.4 [31.5]	(86.9)	979.6 [9.4]	(79.5)	2423.0 [24.1]	(96.7)	1958.0 [16.4]	(95.8)
其他原料	1071.5 [13.9]	(53.5)	823.6 [10.9]	(47.4)	0 [0]	(0)	792.0 [7.9]	(67.8)	440.0 [3.7]	(39.4)
醫藥, 藥劑品	16.0 [0.2]	(3.0)	13.5 [0.2]	(1.4)	75.3 [0.7]	(7.1)	67.0 [0.7]	(21.0)	190.0 [1.6]	(40.7)
工藝品	3.7 [0.0]	(0.9)	5.1 [0.1]	(1.6)	0 [0]	(0)	0 [0]	(0)	0 [0]	(0)
雜品	7.3 [0.1]	(37.8)	1.2 []	(100.0)	0.3 [0.0]	(100.0)	78.0 [0.8]	(100.0)	26.0 [0.2]	(61.9)
合計	7726.3 [100.0]		7571.2 [100.0]		10,442.4 [100.0]		10,035.0 [100.0]		11,946.0 [100.0]	

주: 政府輸出과 援助輸出은 除外

[]안은 對日輸出 總額에 對한 當該商品 輸出額의 比重.

()안은 韓國의 當該商品 輸出總額에 對한 對日輸出額의 比重.

자료: <<무역연감>>(원자료는 상공부).

10) 상공부의 자료에 의하면, 59년 면제품은 1,259천 달러, 잠사제품은 483천 달러였다.

11) 비료의 비중이 1958년까지 적었던 이유는 비료가 원조에 의해 수입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표 9> 商品別 對日輸入의 推移

(단위: 천달러, %)

	1955		1956		1957		1958		1959	
食料品	245.7 [3.7]	(7.1)	224.2 [2.7]	(3.0)	306.8 [2.6]	(3.0)	352.0 [3.2]	(4.2)	220.0 [2.0]	(2.3)
纖維品	1,250.4 [18.9]	(4.3)	2,420.2 [29.5]	(25.8)	3,152.7 [26.8]	(41.8)	2,570.0 [23.5]	(24.1)	2,356.0 [21.2]	(15.6)
燃料	25.7 [0.4]	(1.9)	1.8 [0.0]	(1.0)	310.7 [2.6]	(36.6)	327.0 [3.0]	(39.6)	231.0 [2.1]	(15.7)
皮革 및 木材	164.2 [2.5]	(38.5)	122.1 [1.5]	(94.9)	130.4 [1.1]	(83.8)	108.0 [1.0]	(100.0)	88.0 [0.8]	(68.8)
肥料 및 飼料	0 [0]	(0)	0 [0]	(0)	279.1 [2.4]	(35.3)	104. [1.0]	(14.8)	2,145.0 [19.3]	(45.6)
窯業 및 建築資材	127.3 [1.9]	(20.3)	234.4 [2.9]	(51.9)	435.4 [3.7]	(81.9)	192.0 [1.8]	(29.4)	149.0 [1.3]	(9.6)
金屬類	1,042.9 [15.8]	(44.1)	601.2 [7.3]	(32.5)	814.5 [6.9]	(52.2)	304.0 [2.8]	(35.1)	324.0 [2.9]	(4.6)
其他 原料	20.1 [0.3]	(1.5)	19.8 [0.2]	(34.3)	38.2 [0.3]	(22.1)	37.0 [0.3]	(14.4)	33.0 [0.3]	(2.6)
其他 加工品	43.4 [0.7]	(5.1)	121.9 [1.5]	(51.4)	185.0 [1.6]	(82.0)	98 [0.9]	(53.3)	38 [0.3]	(80.9)
紙類	247.3 [3.7]	(2.7)	765.1 [9.3]	(28.8)	1,057.2 [9.0]	(29.2)	1,124 [10.3]	(27.8)	658 [5.9]	(12.0)
有機化工	318.7 [4.8]	(6.6)	573.1 [7.0]	(30.2)	768.4 [6.5]	(33.6)	888 [8.1]	(23.5)	722 [6.5]	(11.0)
無機化工	260.5 [3.9]	(19.1)	440.2 [5.4]	(40.3)	671.2 [5.7]	(49.5)	581 [5.3]	(32.9)	614 [5.5]	(35.8)
醫藥, 藥劑品	9.6 [0.1]	(0.3)	16.6 [0.2]	(1.4)	83.0 [0.7]	(5.6)	105 [1.0]	(3.3)	82 [0.7]	(2.7)
機械 및 器具	2,602.4 [39.3]	(38.0)	2,224.2 [27.1]	(45.2)	3,213.6 [27.3]	(50.3)	3,460 [31.7]	(49.5)	3,232 [29.0]	(34.6)
雜品	254.7 [3.9]	(17.1)	446.4 [5.4]	(22.0)	337.7 [2.9]	(20.5)	675 [6.2]	(27.8)	243 [2.2]	(11.2)
合計	6,613.7 [100.0]		8,211.8 [100.0]		11,784.7 [100.0]		10,925 [100.0]		11,135 [100.0]	

주: 정부수입과 원조수입은 제외.

[]안은 대일수입 총액에 대한 당해상품 수입액의 비중.

()안은 한국의 當該商品 輸入總額에 對한 對日輸入額의 比重.

자료: 표 8과 동일.

III. 한국의 대일무역정책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의 대일무역은 항상적인 무역적자에 의해 특징지워진다고 할 수 있

다. 한국정부의 대일무역정책도 대일역조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 집중되어 있었다. 1950년대의 한국 무역정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양적 규제를 통해 무역을 규제하고자 한 점이다. 당시, 복수환율제여서 환율은 대외적 조정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으며, 거대한 무역적자는 원조자금에 의해 부족한 외환은 주로 양적 규제에 의해 배분되었다(김광석·웨스트팔 1975). 즉, 수입할당제를 실시하여 직접적으로 수출입을 규제하거나, 특정상품수출에 대해 수익성이 좋은 특정상품수입을 할 수 있는 외환을 유리한 환율로 배분하거나 하는 것이 주요 수단이었다. 대일 무역정책도 이러한 무역정책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하에서는 주요한 대일무역정책을 시기별로 살펴보도록 한다.

1. 한일통상협정의 체결

해방 후 군정 하의 한국 무역은 군정 당국의 완전한 통제에 놓여있었다. 민간무역은 1947년 1월 3일 미군정법령 제39호 <대외무역규칙>이 공포된 후에 재개되었다. 이 규칙에 의해 모든 민간무역활동은 군정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대외무역규칙은 수출입허가제도를 규정한 상공부규칙 제1호(1947년 8월 25일 공포)에 의해 대체되었다.

일본과의 무역 또한 양국에 주둔한 군정당국의 알선 하에서 제한적인 무역이 있었을 뿐이나, 1949년 4월 19일 한일통상협정이 <SCAP(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당국의 알선으로 체결되어 종래의 불안정한 교섭으로부터 일정한 궤도에 오른 무역이 실현되었다. 이 협정은 1949년 4월 1일부터 50년 3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서, 교역은 정부무역 및 정부허가 민간무역에 한정되었으며 결제는 미달러화로 하도록 되어 있었다.¹²⁾ 또한, 교역물자계획이 첨부되어 있으나 양국의 교역은 이 계획에 의해 구속되는 것은 아니었다. 참고로 교역물자계획의 내용을 보면, 교역총금액은 1년간에 약8천만 달러였으며, 한국측에서 쌀 1,600만 달러의 수출이 불가능할 때는 약 3,600만 달러의 입초교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한일간 무역은 엄중한 정부의 통제무역이었던 것과 상호교류물자의 균형상실, 품질에 대한 <클레임>의 속출 및 미묘한 쌍방의 정치정세로 인해 불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거의 정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¹³⁾ 이러한 한일통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CAP> 측은 1949년 10월 14일 서울에서 한일통상중간회담을 개최하고 쌍방 제시의 제조건을 검토하여 경신된 협정을 12월 25일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즉 동 협정에서 일본측은 수출 3백만 달러를 증가한 5,198만 7천 달러, 한국측은 100만 달러 증가의 3,000만 달러, 계 8,189만 7천 달러의 무역을 금년 3월까지 시행하기로 하였다. 한국은 그 90%까지를 민간무역으로 이양하여 간소한 수속에 의한 개인의 자유거래를 허가하였으며, 일본도 1950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민간수입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신무역방식 채용 이후 일본의 외국환예산이 대한수입할당량은 극소하였던 관계로 한일무역은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1949년 4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 현재 수입은 11,324,522달러, 수출은 3,015,029달러로서 협정액의 5분의 1내지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었

12) 《朝銀調査月報》, No.22, 1949년 5월.

13) 《朝銀調査月報》, No.30, 1950년 1월.

다.¹⁴⁾

이러한 가운데 한일통상 2차년도 협정이 1950년 3월 27일부터 동경에서 <SCAP> 당국 알선 하에 개최되어, 4월 10일 원칙적 타결을 이루고 6월 8일 1950년도 한일통상협정이 성립하였다. 동협정은 민간무역을 추진하는데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금융(재정)협정, 무역협정 및 무역계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금융협정

양국은 달러로 표시되는 한일상호청산계정을 일본은행에 둔다. 양국간의 무역에 관한 모든 거래는 이 계정에 기록되어, 양국은 계정의 잔액에 대해서만 결제한다.

청산계정에는 200만 달러의 스윙(swing, 신용증여한도)을 용인한다. 대일 입초액이 200만 달러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즉시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대일 입초액이 200만 달러를 초과하여도 한국의 대일수출이 250만 달러에 달하지 않으면, 입초액 중 2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결제할 필요는 없다.

단, 입초액이 500만 불을 넘으면 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

② 무역협정

양국은 1년을 기간으로 하여 무역계획을 작성한다.

양국은 무역계획의 추정액에 의하여 외국환 또는 외환 크레디트를 할당하거나 승인하여야 한다. 단, 이 계획은 구속적인 약속은 아니며, 양국간에 무역을 실행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 까지 발전하고자 하는 희망의 결과이다.

1950년도(1950년 4월부터 51년 3월까지)의 계획은 대일수출 953만 5천 달러, 대일수입은 2,550만 달러였다. 한편, 이 계획에 한국의 미곡수출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1951년도는 수출 1,600만 달러, 수입 3,200만 달러로 개정되고 그 후는 이 계획이 답습되었다.

한국정부는 위의 협정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였다.

첫째, 이 협정에 의해 한일간의 무역대금은 업자대 업자가 개별적으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계정(open account)에 의해서 국가대국가로 결제하게 됨으로써 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였다.

둘째, 한국은 이 협정에 대해 일본의 대한수입을 강요하는 효과를 기대하였으며, 한국에 유리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우선, 무역협정에는 계획에 표시된 상품량까지는 수출입허가를 발급하는데 동의하며 또한 외환을 할당할 것이 규정되어 있어, 종래의 협정과 대비할 때 수출입허가의 전제가 되는 외화자금의 할당무제를 가한 점에서 현저한 진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금융협정에 의해 일본은 항상적인 한국의 대일입초의 상황에서 대한수출에 대한 외화를 수취하기 위해서는 한국으로부터 250만 불 이상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¹⁵⁾ 단, 스윙 한도가 200만 달

14) 《朝銀調査月報》, No.31, 1950년 2월.

15) 한일통상협정에서 스윙을 설치한 것에 대해 무역협회는 “이는 일본측의 수입을 강요하여 한국측의 대일수출은 촉진되지 않을 수 없으니 일본측은 불리하고 한국측에 유리한 것이라 하겠다. (중략)일본이 달러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은 양국간의 종래부터의 밀접한 경제관계와 정치적 관련성에 기인한 바도 없지 않겠지만, 일본의 경제부흥은 외국무역부흥에 의존되기 때문에 한일재정협정이 당장은 불리한 점도 있으나 수출시장을 개척확보하기 위하여

러인 것은 대체로 당사국의 수출입계획 총액의 10% 정도가 타당하다고 하는데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라는 지적도 있었다.¹⁶⁾

1950년도에 이러한 한일통상협정이 성립하게 된 것은, 일본의 새로운 무역정책의 실시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연합군의 군정하에 45년 12월 무역청을 설립하여 엄격한 관리무역을 시행하여 왔으며, 1947년 8월부터 제한적으로 민간무역을 허용하였으나, 1948년 1월까지 수출실적에 대한 민간수출의 비율은 8.6% 내외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49년부터 덩치라인이 실시되면서 무역면에서도 일본경제를 자유경제로 이행시키고자 하는 이른바 <로간> 라인이 제출되어 사령부는 이에 기초하여 수출입무역의 대폭민간이행을 일본정부에 지령하였다. 이에 따라 수출은 1949년 12월 1일부터 거의 자유무역으로 이행되었고, 수입에서도 50년 1월 1일부터 <가리오아>, <이로아> 물자 이외에는 민간참가가 허용되었다. 1949년 11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여 12월 1일부터 실시한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은 외국무역에 관한 복잡한 법률을 정비하여 종합적 기준법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의한 신무역방식을 요약하면 “가능한 한 무역상의 관청통제를 철폐하고 민간업자의 자유경쟁에 의하여 무역량을 증대하고 나아가서는 국내통제를 철폐하여 자유경제에의 복귀를 촉진시키”는 것이었다.¹⁷⁾

1949년부터 다시 협의되기 시작한 한일통상협정도 일본의 이러한 신무역방식을 반영한 것으로서, 이로써 정부의 통제와 간섭은 최소한도로 줄이고 한국업자와 일본업자가 직접 상거래를 하게 되었다. 2차 협정시의 오픈 어카운트의 설정도 신무역방식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었다.

2. 대일수입억제 정책

한일통상협정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수출은 크게 확대되지 못했다. 반면, 대일수입은 크게 늘어 대일 역조는 증가하였다.

《韓銀調査月報》(1951.4/6)에 의하면, 1950년도의 대일수출은 2,014만 2천 달러, 수입(원조수입 제외)은 1,107만 1천 달러로 907만 1천 달러의 흑자를 보았다.¹⁸⁾ 그러나, 위의 수출액에는 통상협정의 대상이 아닌 미곡수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대일수출을 계산하면 733만 6천 달러가 되며, 이를 무역계획과 비교하면 수출실적은 계획의 76.9%, 수입은 43.4%에 불과했다.

1951년도의 무역계획(51년 4월~52년 3월)은 수출 1,600만 달러, 수입 3,200만 달러로 수출입액 모두 증대되었으나, 실적은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1951년 12월말로 수출총액이 346만 달러, 수입총액이 1,094만 달러로서 계획량의 각각 22%, 및 32%의 달성에 불과하여 오는 3월까지 해태를 비롯한 해산물 250만 달러의 수출과 이 대금을 代充으로 하는 수입의 증가가 실현되

장래의 무역증진을 생각해서 眼前의 小利를 희생한 것”(《貿易年鑑》 1951/52년, p.54)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며, 한국은행도 “일본측 수입의 부진상태를 타개하고 불균형에 입각하는 한일무역을 가능한 한 확대하려는 특별한 고려를 표시하는 것”(《韓銀調査月報》 1951 4/6)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16) 《韓銀調査月報》, No.71, 1954년 10월.

17) 《朝銀調査月報》, No.30, 1950년 1월.

18) 수출이 많았던 이유 중의 하나는 戰禍를 피하기 위하여 일본으로 반출한 물량 중의 상당 부분이 대일수출로 잡혔기 때문이다.

어도 그 달성액은 수출 30%, 수입 50% 정도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대일수출 부진의 결과 **한일청산계정**에는 52년 1월 22일 현재 약 399만 8천 달러의 부채를 가지게 되었다. 즉, 지불결제해야 할 밸러스가 스윙 한도 200만 달러를 제하고도 약 2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¹⁹⁾

이와 같이 대일수출이 부진하고 대일역조가 확대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한국의 정책당국은 수출부진에 관한 일반적인 요인(예를 들면 환율문제) 외에 일본과의 무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수한 요인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첫째는 한국의 시장구조의 문제로서 파악하고 있었다. 즉, 한국은 그 경제재건을 위한 원료자재 및 생활필수품 등 각 방면에 걸쳐 일본상품에 대한 수요도가 높는데 반하여 일본측 입장에서는 한국의 미곡이나 극소종의 광산물 이외에는 긴급히 요구되는 상품이 적기 때문에 대일역조는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²⁰⁾

둘째는, 이것도 한국의 시장구조의 문제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대일수출을 다른 시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일제가 남긴 구습과 기존산업시설이 日商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 그 대부분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상존할뿐더러 일본상품을 사용해 온 소비자의 애착심은 좀체로 기타의 외국상품으로 대체하기를 반기지 않았으며 수입업 역시 단시일 내에 속히 도입하여 자금의 회전을 빨리 할 수 있는 일본지역으로부터의 수입에 安堵感을 가지고 있었”다.²¹⁾

셋째로, 일본의 무역 및 외환정책이 한국의 대일수출에 호의적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었다.

일본은 달러의 부족이라는 상황 하에서 외화할당정책에 의해 선별적으로 상품을 수입하고 있었다. 즉, 중요수입물자의 도입촉진책으로 <자동승인제> 내지 <외화할당제>를 강구하는 한편 기타 수입건요도가 낮은 물품에 한해서는 그 당시의 외환사정을 고려하여 수입허가를 하는 <선착순제>를 前記한 것과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었다. <자동승인제> 및 <외화할당제> 대상의 상품에는 다액의 외화가 할당되어 수입도 편리했던 반면 <선착순제> 대상 상품의 수입은 외화할당금액이 적고 복잡한 수입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런데 한국측 상품의 수입은 이와 같은 <선착순제>의 규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물품의 대일수출증가는 기대기 곤란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었다.²²⁾

이러한 일본의 무역 및 외환정책은 한국측에게 일본이 한일통상협정에 대한 무성의한 것으로 비추어졌다. 즉, 일본측은 무성의하고 고의적인 제약 등으로 동협정을 이행하지 않아 협정액의 절반도 대한수출을 실행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기계류와 기타의 중요한 원료재의 대한수출에 있어서도 차등가격을 적용하여 부당한 제약을 가하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상품인 해태, 선어, 농산물 및 광산물 등의 자국내 수입을 되도록 억제하는 방침을 취했음을 비판하고 있었다.²³⁾

이러한 일본측의 한국상품 수입에 대한 규제로서 <김>에 대한 일본의 보호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韓國生産性本部・日本經濟調査協議會 1965). 한국 김의 대일 수출은 일본업자들의 반발로 종종 중단되곤 했는데, 1963년 경우 한국의 수출여력이 약 5억 매인데 불구하고 1억 매

19) 《韓銀調査月報》, No.43, 1952년 2월. 1951년도 대일수출실적은 최종적으로는 521만 달러 계획의 32.5%에 불과했다.

20) 《韓銀調査月報》, No.36, 1951년 4/6월.

21) 《貿易年鑑》 1956/57년.

22) 《韓銀調査月報》, No.55, 1953 4/5월; No.66, 1954년 5월.

23) 《貿易年鑑》 1956/57년.

정도 밖에는 수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일본의 해태수입은 통산성이 일본의 <한국해태수급 조정협의회>에 자문을 구하고 그 답신에 의해 <일본해태수입협회>에 수입을 위한 외환할당을 하게 되어 있다. <협의회>에는 일본의 생산자대표, 수입상사, 해태객주가 참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복잡한 기구가 한국해태의 수입통제기구로서 작용하고 있었다. 그 결과, 한국의 해태 100속(1만장)의 가격이 한국 도매가격으로는 100엔 전후인데 반해 일본에서의 도매가격(東京海苔客主組合의 객주간 거래가격)은 1200엔 전후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값싼 한국 김의 수입이 억제당하고 있었다. 이처럼 김과 같은 대중상품을 일부 생산자만을 위하여 수입을 제한하여 소비자에게 비싼 가격을 강요하고 있는 정책은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대일수출 부진 및 대일역조 확대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인 것이었다. 즉, 한국의 정책당국은 대일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었으나,²⁴⁾ 적극적으로 대일수출을 증진하는 정책을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일본과의 무역관계를 축소하는 정책을 취했다.

대일수출 부진 및 대일역조 확대에 대한 한국정부의 반응은 우선 수출 및 수입의 다변화정책이었다. 한국정부는 1952년부터 일본에 편중적인 무역구조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한국무역협회 1972: 233). 1952년 1월 8일 정부는 수출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청산협정지역(일본) 이외의 수출을 촉진한다는 수출정책의 기본방향을 명시하였다. 이와 같은 방침 하에 정부는 1952년 2/4분기부터 청산협정지역인 일본과 기타지역과의 광산물수출계획액 비율을 종래의 4.7대 5.3에서 2.9대 7.1 수준으로 수정책정하여 비청산협정지역에의 수출비중을 대폭 증대하였다. 그리고 3/4분기부터는 일본과 비청산협정지역과의 수산물수출계획액 비율도 종래의 6.2대 3.8에서 3.9대 6.1로 수정 책정하여 주로 동남아시아에의 수출증진을 기도하였다. 이와 같은 해외시장개척은 1953년에도 계속 추진되어 비청산협정지역에 대한 수출실적은 약 70%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대미수출증대와 필리핀 및 대만에의 수출증대의 결과였다.

한편 정부는 수입면에서도 대일편중을 시정하기 위해 직접적으로는 수출입쿼터 책정에 있어서 일본지역에 대한 금액책정을 가능한 억제하였으며,²⁵⁾ 직수입원칙을 세워 1952년 10월부터 일본 이외의 기타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직수입하도록 수입계획을 책정하고 외환의 할당을 이에 우선적으로 배정하였다(貿易協會 1972: 236).

그러나 1953년 한국의 대일수입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통화흡수, 물가안정을 위한 特別外貨貸付弗에 의한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이에 의해 대일수입이 허용되었기 때문이다.²⁶⁾ 기타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장려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 결과 1955년 6월 30일 현재 대일청산누계액은 <스윙>금액 200만 불을 제외하고 아직도 4610만 7천 불에 달하였다.

24) 예를 들면,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제는 일본경제와의 연관 하에 순환되어 왔으며 기계설비의 가격 같은 것도 일본공업과 직결되어 있다. 제2차대전 후의 일본생산수준의 급진적 상승과 일의대수의 지리적 조건에 비추어 일본이 한국에서 수요되는 물자의 가장 유리한 공급원이 될 것이다. 현재 세계경제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미국의 그것으로 직결시키도록 함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찰할 때 우리나라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일본과의 교역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韓銀調査月報》, No.41, 1951년 12월).

25) 《貿易年鑑》 1954년.

26) 1952년 12월부터 54년 7월까지 정부는 수출업자와 기타 국내산업에 대해 특별외환자금의 대부분을 실시하였다. 그 금액은 9,610만 달러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총수입(정부수입을 포함)의 45%, 민간수입의 75%에 대해 자금지원을 하였다. 이 특별외환대부금의 주요 재원은 國聯軍貸與金の 償還弗收入과 重石수출로 획득한 外換收入이었다(김광석·웨스트팔 1976)

이러한 상황 하에 한국정부는 대일수입을 직접적으로 억제함으로써 대일역조를 해결하고자 했다. 1954년 3월 20일 특별외화대부불에 의한 대일수입의 금지조치를 취하고 동년 4월 다시 對日收支의 均衡原則을 수립하여 일본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은 동지역에 수출하여 획득한 외화로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강경한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동년 7월부터는 特惠外換²⁷⁾에 의한 대일수입도 금지하였다. 나아가서 한국 정부는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이 무역협정을 체결한 데 대한 보복조치로서 1955년 8월 18일 일본과의 교역금지조치를 취하였다.

일본과의 교역금지조치는 한일무역에 대혼란을 가져왔다.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55년 10월 14일 경과조치를 취하여 미완결 거래에 대한 처리를 실시하였다. 결국, 한일간의 무역은 56년 1월부터 주일대표부의 사전승인제도에 의해 재개되었다. 이 방법은 일본지역과의 거래에서는 업자의 왕래를 일체 금지하고 수출업자는 사전에 주일대표부 상무담당관에게 사전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출입의 계약체결에 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수출 또는 수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1956년 4월부터는 주일대표부에서 수입사전승인시 한국은행이 증명하는 수입용 외화소지증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사전승인제는 1957년 12월 무역법의 공포에 의해 58년부터 동법이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1956년의 단교조치가 해제된 후, 한일무역은 계속 대외균형수지 원칙 하에 이루어졌으며, 한국정부는 대일본지역 수입을 대일본지역 수출불에 국한하고 그 외의 외환은 전부 기타지역의 수입에 충당하였다. 또한, 1959년 6월 15일에는 재일교포 복송에 대한 항의로서 두 번째 대일무역중단조치가 취해졌다. 이 때는 동년 10월 및 60년 2월의 두 번에 걸친 예외조치를 거쳐, 60년 4월 7일에 해제되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의 대일무역정책은 일본과의 교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오히려 일본과의 교역을 저해하는 방향에서 실시되었다. 일본과의 단교조치는 그 대표적인 것으로, 당시에 있어서도 “경제정책의 일환으로서의 무역정책이 경제적인 사려에서가 아니라 지나치게 경제외적인 힘에 의해 지배된 결과 발생”(《貿易年鑑》1956/57)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이와 같은 대일교역의 순조로운 발전을 제약해 온 경제외적인 힘은 결국은 이승만 정권의 퇴진에 의해서 비로소 배제될 수 있었다.

3. 대일무역정책의 전환

—수출진흥정책의 추진과 대일수입제한조치의 해제

1950년대의 대일무역정책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일수입억제를 중심으로 하는 소극적인 것이었으며, 적극적인 수출진흥정책은 취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1960년의 4·19에 의해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면서 대일무역정책도 큰 전환을 하게 된다.

북진통일과 반일 이데올로기를 통치이데올로기화하고 있던 이승만정부는 경제개발에 무관심

27) 이 제도는 1951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에서는 특정한 비필수국내생산품의 수출업자에 대해 그 수출가득액의 1% 내지 10%(평균 5%)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 수입이 허가되지 않았던 40종류의 인기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 제도는 1953년에 더욱 강화되어 인기품목수입에 사용될 수 있는 수출가득비율을 4% 내지 50%(평균 15%)로 인상시켰다. 그러나 이 제도는 1955년 8월의 평가절하와 함께 폐지되었다.

하였던 반면, 민주당의 장면 정부는 경제개발 제일주의를 전면에 내세워 정권의 취약한 기반을 경제개발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다(박태균 2000; 2002). 민주당의 무역정책도 경제개발 제일주의 하에 적극화되었다.

첫째로, 무역정책 전반에 관한 것으로서, 적극적인 수출진흥책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장면정부는 1955년 처음으로 시행되었다가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었던²⁸⁾ 수출장려보상금의 교부를 부활시켰다. 수출장려보상금은 1960년도에 1억 환이 배정되어 9,900만 환이 교부되었으며, 61년도 당초 **예산**에는 3억 환으로 증액되었다가 제1회 추경예산에서 10억 환으로 다시 증액되었다. 수출장려보상금제도는 군사정부에도 승계되어 61년도 제3차 추경**예산**에서 다시 35억 환이 증액된 45억 환이 책정되었으며 62년 1월 20일까지 30억 7천만 환이 교부되었다. 한편, 민주당 정부는 수출장려보조금의 지급과는 별도로 1960년 4월 <수출시장개척비 교부요령>을 공포하여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둘째로, 장면정부는 대일교역의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우선, 정부는 대일수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1960년 8월 쌀 3만 톤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72만 톤에 이르는 해태의 대일수출을 허가하였다.

또한, 외환관리면의 변경으로 수입에 대한 지역별 차등대우 즉 대일수입제한조치를 폐지하여, 원조불을 제외하고는 모든 외환에 의한 대일구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 조치에 의해 대일수입이 급증하자 일본정부는 대한채권의 누증을 억제하기 위해 61년 3월 한일청산계정을 통한 대한수출을 표준결제방식에서 제외하여 통산성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대한수출을 억제하였다. 그러나 동년 4월 22일 양국 정부는 각서를 교환하여 한국정부는 대일채권의 조속한 청산을 고려하는 한편 일본정부는 한국산품의 수입증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함으로써, 한일통상증진의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²⁹⁾

이와 같이 장면 정부는 수출진흥을 도모하고 대일무역의 활성화를 꾀하였는데, 이러한 정책은 군사 정부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군사 정부는 수출장려보조금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62년 3월 <수출진흥법>을 공포하여, 수출품제조용 원료에 대한 외화사용의 특혜, 수출입 <링크제>아

28) 1954년도 정부지출예산에서 3900만 환의 수출장려보상금이 책정되어, 교부대상수출품목으로 5개품목(고령토, 납석, 형석, 건멸치, 건어)이 선정되었으나, 실제로는 건멸치를 제외한 4개 품목에 대해 1,036만 환이 교부되었다. 수출장려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1956년 12월 대통령령으로 <수출장려보상금 교부규칙>이 제정, 공포되었으나 책정된 예산이 없어 1961년까지 시행되지 못했다. 동 교부규칙은 1961년 9월 <수출장려보조금 교부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 공포에 의해 입법화되었다.

29) 《貿易年鑑》 1963년. 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우리나라 정부는 1961년 1월 31일 현재 청산계정상의 부채가 45,729,398.08달러임을 확인하며 이를 되도록 조속히 청산할 것을 고려한다.
- ② 1950년 6월 2일자 한일재정협정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매월 10일에 전기 부채잔고를 초과하는 전월 말 현재 부채액을 전액 상환하며 동 초과액이 200만 달러를 **초과**할 때에는 즉시 동 초과액의 전부를 지불해야 한다.
- ③ 한일양국정부는 양국간의 현행거래에 관하여 청산계정을 지양하고 현금지불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전기한 한일재정협정을 종결시키고 새로운 재정협정체결을 협의하기로 한다.
- ④ 일본정부는 일본의 외국무역 및 외환관리의 전반적인 자유화정책에 따라 그 권한 내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수입을 증가시키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래 보조금 지급 등의 각종 수출진흥정책을 추진했다. 한편, 군사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이러한 대일관계 개선의 움직임에는 미국의 영향이 컸다. 1961년 초에 들어선 케네디 행정부는 기존의 대한정책을 크게 전환하여 한국의 경제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다는데, 이 때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박태균 2000).³⁰⁾

군사 정부를 뒤이어 성립한 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대한정책의 전환을 배경으로 하여 강력한 경제개발정책을 취하는 한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여, 1965년에 한일국교정상화를 실현했다.

IV. 맺음말

1950년대의 한국경제는 한 시스템, 즉 일본제국주의의 종속적 구성원으로서 편입되었던 위치에서, 다른 시스템, 즉 미국의 주도하에 구축된 브레튼우즈 체제의 독립적 일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 위치로 이행하는 과도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일경제관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과거 일본의 식민지로서 일본에 대한 식량 및 원료의 수출과 일본으로부터의 공업제품의 수입이라는 구조에서, 경공업제품의 수출과 중공업제품의 수입이라는 새로운 한일간 분업구조로 변화하는 과도기였다. 이 과도기에 근대 이후 계속 확대경향을 보여 온 한일간 무역은 크게 침체되었고 뚜렷한 발전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한일간 무역이 다시 장기적인 확대 경향으로 복귀하는 것은 1960년대 이후의 일이었다. 반면, 일본 역시 과거의 일본제국주의 경제권이 붕괴되면서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에 적응하기까지의 과도기를 거치지만, 일본은 한국과의 무역비중을 크게 줄이면서도 50년대에 이미 세계무역의 확대경향에 동참하여 가고 있었다. 한국이 전후의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의 한일관계의 새로운 발전패턴을 찾지 못한 채 장기간의 침체기를 겪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한국 경제가 일본 제국주의 경제권에 대한 통합정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다. 일본과의 무역이 식민지 한국경제에서 가지는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일본과의 단절의 충격은 그만큼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 언급한, 소비자들의 일본상품에 대한 애착심 또는 기계설비가 모두 일본제품이기 때문에 대일 수입의 전환이 어려웠다고 하는 당시의 인식은, 과거 식민지 한국경제가 일본에 깊이 의존하고 있었으며, 그 일본경제와의 단절을 다른 경제권과의 교류에 의해 대체하기 어려웠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과거 시스템에 대한 파괴가 철저하였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일본과의 경제교류가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 분단에 의해 식민지 한국 내의 분업관련도 파괴되었다. 더구나, 한국전쟁은 기존의 생산기반에 대해 피멸적인 타격을 가했다. 미국수출국이었던 한국이 전쟁으로

30) 미국이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강조한 이유로서는, 첫째, 한국의 빠른 경제개발계획을 위해 일본의 원조가 필요하며, 둘째, 수출을 위한 일본의 시장이 필요하고, 셋째, 자유세계의 단합과 아시아의 힘을 막는 중요한 걸림돌이 제거되어야 하며, 넷째, 북한 공산주의 정권과의 점증하는 심각한 경쟁에서 한국의 권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박태균 2000).

농업생산기반이 파괴됨으로써 식량 수입국이 된 것은 그 단적인 예이다.

셋째는, 양국의 정치적 상황이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이행을 어렵게 했다. 한국의 이승만 정권은 반일 이데올로기를 자신의 정권의 통치 이데올로기화함으로써 최대의 무역상대국이 될 수 있는 일본과의 교역확대에 소극적이었으며 브레튼우즈 체제 하에 확대하여 가던 세계 무역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했다. 한편, 패전 후 일종의 중상주의적 정책을 취하고 있던 일본도 한국과의 교역확대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국 이해의 보호를 위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억제 하곤 했다.

한일간의 무역이 다시 증대하고 한국경제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속에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게 된 것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였다. 이러한 전환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승만 정권의 붕괴라는 정치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일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일본과의 교역의 확대가 적극 추진되기 시작했다. 또한 미국의 케네디 정부는 한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한정책을 전환하였으며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중시하였다. 반면, 일본은 이 과정에 소극적이었으며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처럼 50년대를 통해 좀처럼 새로운 성장패턴을 찾지 못한 채 긴 과도기를 보내고 있던 한국은 정치적 변화를 기점으로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이행을 본격화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이행이 반드시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의 한국경제사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60년대 후반에 확립되었다고 생각되는 경공업제품 수출과 기계류를 중심으로 하는 중화학 공업제품의 수입이라는 패턴은 이미 30년대 후반에 맹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1950년대 후반에 면제품의 수출이 시작되고 기계류가 최대의 수입품으로 그 비중을 점차 늘려가고 있던 움직임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농산물 수출·공산품 수입에서 경공업 수출·중공업 수입이라는 발전경로가 정치적 격변으로 일시 중단되었다가 50년대 후반부터 다시 계속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參考文獻】

- 商工部(1971), 《通商白書》.
- 韓國銀行(1990, 2000), 《國民計定》.
-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 韓國銀行, 《經濟年鑑》
- 韓國貿易協會, 《貿易年鑑》
-
- 김광석· 웨스트팔(1976), 《한국의 외환무역정책》, 한국개발연구원.
- 김낙년(2003), 《일제하 한국경제》, 해남.
- 김대환(1981), 〈1950년대 한국경제의 연구〉, 《1950년대의 인식》, 한길사.
- 김양화(1996), 〈1950년대 한국의 공업화과정〉, 《潭史감중현교수정년기념논문집: 공업화의 제유형(2) - 한국의 역사적 경험》, 경문사.
- 박태균(2000), 〈1956-1964년 한국경제개발계획의 성립과정〉,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논문.
- (2002), 〈1950·60년대 경제개발 신화의 형성과 확산〉, 《동향과 전망》.
- 안병직· 김낙년(1995), 〈한국경제성장의 장기추세(1910~현재) - 경제성장의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 광복50주년기념사업위원회· 한국학술진흥재단, 《광복50주년 기념논문집 3 경제》
- 이대근(1995), 《한국무역론》, 법문사.
- 이대근(2002), 《解放後-1950年代의 經濟》, 삼성경제연구소.
- 이상철(2001), 〈수입대체공업화의 전개, 1953-1961〉, 안병직편, 《韓國經濟成長史》, 서울대학교출판부.
- 임종철(1970), 〈한국무역의 발전(1946-59)〉, 서울대 《경영논집》 4-4.
- 정안기(2001), 〈戰間期 朝鮮紡織의 사업경영과 금융구조〉, 《경제사학》 제30호.
- 주익종(2002), 〈後發者와 後後發者 - 일제하 朝鮮紡織(株)와 京城紡織(株) -〉, 《경제사학》 제32호.
- 최상오(2003),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과 공업화전략〉, 《경제사학》 제35호.
- 한국무역연구소, 《일본의 무역정책에 관한 연구》, 1972
- 韓國貿易協會,(1972), 《韓國貿易史》.
- 韓國産業銀行(1956), 《韓國産業經濟10年史》.
- 한국생산성본부· 일본경제조사협의회, 《한일경제협력의 방향과 그 배경 - 한일경제공동조사보고서 -》 (1965)
-
- 通商産業省, 《通商白書》
- 通商産業調査會(1967), 《戰後日本の貿易20年史: 日本貿易の發展と變貌》
- 溝口敏行· 梅村又次編(1988), 《旧日本植民地經濟統計》, 東洋經濟新報社.

[비평문]

오코노기 마사오

정진성교수의 논문 <1950년대 한일경제관계—한일무역을 중심으로>는, 1950년대 한일경제 관계를 양국간의 무역 측면에서 검토하고, <이 시기가 한일 양국의 경제관계에서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 시기 양국의 경제 관계는 거의 무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역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거의 그대로 경제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거기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적었다. 그런 의미에서 각종 무역통계를 구사한 이 논고는 귀중하다.

결론적으로 정교수는 식민지시대의 일본 경제에서의 단절, 조선전쟁에 의한 철저한 파괴, 이승만 정부의 반일정책 등으로 인하여, 1950년대의 한국경제는 과거의 시스템에서 완전히 이탈하고, 한일관계의 새로운 발전 패턴을 찾지 못한 채로 긴 과도기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1960년 정치적 변화를 기점으로 하여,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이행이 본격화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거기에 보이는 경공업제품의 수출과 기계류를 중심으로 한 중화학 공업 제품의 수입이라는 발전 패턴이, 이미 1930년대 후반 조선에서 맹아적으로 존재하였고, 긴 중단기를 거쳐서 60년대에 재개하였다고 하는 흥미로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논문은 연구분야를 달리하는 평자에게는 흥미로운 것이지만, 몇몇 의문과 주문이 있다. 예를 들면, 1950년대의 한일경제관계의 역사적 의미를 고찰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는 일본측의 대한무역정책에 대해 논급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부분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본 논문은 지나치게 한국측의 논의에 치우쳐있다. 또 <정치적 변화를 기점으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본격적으로 이행하였다는 설명은, 지나치게 일반론적이다. <이승만정부는 경제개발에 무관심하였다>라든가, <이승만 정권은 반일 이데올로기를 자신의 정권의 통치 이데올로기화함으로써 최대의 무역상대국이 될 수 있는 일본과의 교역확대에 소극적이었다>하는 지적도, 그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줄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럼으로 우리들은 어느 정도까지 <무관심>하였는지, <소극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런 <무관심>이나 <소극성>이 어떠한 성질의 것이었는지, 즉 이데올로기에 기인하는 것이었는지, 실행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인지도 매우 흥미로운 검토 과제이다.

[집필자 답변]

오코노기 교수의 필자에 대한 비평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측의 대한무역정책에 대한 언급이 적고 지나치게 한국측 논의에 치우쳐있다.

둘째, <정치적 변화를 기점으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행하였다는 설명은 지나치게 일반론적이다.

셋째, 이승만 정부가 일본과의 무역확대 및 경제발전에 <소극적> 또는 <무관심>하였다는 것의 구체적 사례의 제시, 그리고 그 성격에 대한 고찰, 즉 이데올로기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행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인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위의 비평에 대해 필자는 특별한 반론이 없으며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단, 몇 가지 점에 대해서만 보완설명을 붙이도록 하겠다.

첫째 지적은 필자도 의식한 점이다. 단 시간적·자료적 제약으로 일본측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지 못했을 뿐이다. 앞으로 일본측 자료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 단, 필자가 수집한 제한된 자료를 보는 한에서, 50년대에는 일본의 대한무역정책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낮았으며, 중상주의적 통상정책을 추구하던 당시 대한무역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일본에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추측된다.

둘째 지적에 대해서는 본고는 50년대의 한일무역관계의 실태를 밝히는데 중점을 둔 결과 시스템의 이행기에 관한 고찰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다. 단 본고가 시스템 이행기에서의 정치적 변수의 압도적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50년대 후반의 무역패턴의 변화에 대해서도 유의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

셋째 지적의 경우, 이승만 정권의 경제정책의 성격에 관해서는 최근 박태균 등의 논문 등에서 많은 부분이 밝혀졌으며, 본고의 견해도 이러한 연구성과에 많이 의거하고 있다. 본고에서 밝혔듯이 50년대 후반의 무역패턴의 변화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경제계의 논리를 무시한 한일무역 단절 조치 등은 이승만 정권의 <소극성>, <무관심>에 대한 구체적 사례라고 생각한다.